

청렴결백 KORES를 위한
201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15. 3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실

목 차

I. 우리의 청렴수준	3
1. 공공기관 청렴도 현황	3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5
3. 우리공사의 반부패 청렴현황	7
II.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9
1. 2015년도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9
2. 2015년도 공사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11
III. 2015년도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13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14
2.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18
3. 부패 취약분야 종합관리	22
4.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27
IV. 과제별 추진일정 및 담당부서	31

I. 우리의 청렴수준

1 공공기관 청렴도 현황

공공기관 청렴도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는 하락하는 추세

< 청렴도 점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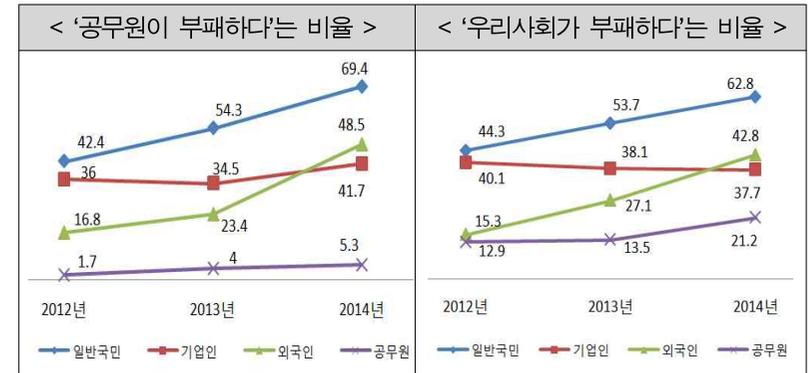
※ '08년·'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악화
 - ※ 부패경험 평가 결과 :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7%→1.7%), ▲ 위법·부당 예산집행(6.2%→7.7%), ▲ 부당한 업무지시(6.6%→6.8%)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영역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모두 하락



국민의 부패인식·경험('14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공직사회 부패수준)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공무원 등 모든 응답자들의 인식이 악화
 - 특히, 일반국민 69.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한 반면, 공직자는 5.3%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여 인식차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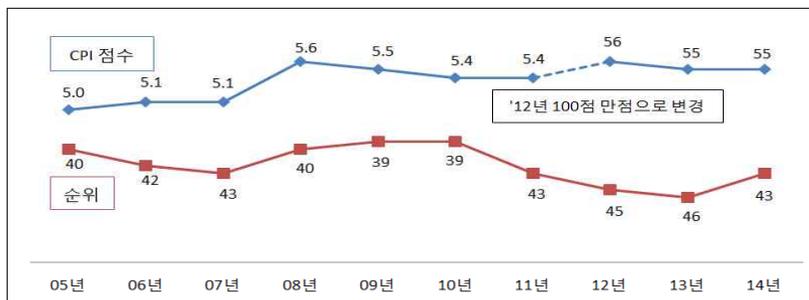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60.0%), 기업인(64.0%), 공무원(51.6%)은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 이라고 응답
- (부패발생원인) 일반국민(33.6%), 공무원(49.4%), 기업인(36.0%), 외국인(43.0%)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음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11개 사회분야 중 '정당·입법'을 가장 부패한 분야로, '시민단체'를 가장 청렴한 분야로 평가
- (부패원인 제공자)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두 번째 부패원인 제공자로 일반국민(24.9%), 기업인(29.3%), 외국인(25.0%) 모두 고위공직자를 지목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중에서 43위

○ '13년과 비교하여 국가순위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황('13년 177개국 중 46위)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9.2점)에 비해 14.2점 낮음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2014	1위 (92점)	2 (91)	3 (89)	13 (78)	16 (74)	20 (69)	23 (61)	24 (60)	27 (55)	32 (43)	32 (43)
2013	1위 (91점)	1 (91)	3 (89)	13 (76)	16 (73)	18 (71)	24 (60)	25 (59)	27 (55)	32 (43)	33 (40)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 수준

< 아시아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싱가포르	일본	홍콩	부탄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태국	중국
2014	1위 (84점)	2 (76)	3 (74)	4 (65)	5 (61)	6 (55)	7 (52)	14 (38)	14 (38)	14 (38)	17 (36)
2013	1위 (86점)	3 (74)	2 (75)	4 (63)	5 (61)	6 (55)	7 (50)	16 (36)	16 (36)	18 (35)	13 (40)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4년도 국가경쟁력 지수는 전년(25위)보다 1단계 하락한 26위

○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133위), '공공자금의 유용'(67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2위)은 여전히 심각

< WEF 국가경쟁력지수 >

구분	'10	'11	'12	'13	'14
국가경쟁력 순위	22/139	24/142	19/144	25/148	26/144
-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111	128	133	137	133
- 공공자금의 유용	56	58	58	62	67
-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51	49	50	57	52

■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4년도 국가경쟁력평가(총 60개국)는 26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

○ 부패 관련 평가인 뇌물공여·부패비리는 전년보다 3단계 하락, 정부 투명성은 전년보다 4단계 하락

< IMD 국가경쟁력지수 >

구분	'10	'11	'12	'13	'14
국가경쟁력 순위	23/58	22/59	22/59	22/60	26/60
정부효율성 부문	26	22	25	20	26
-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29	30	32	28	31
- 정부의 투명성	27	26	29	29	33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4년도 국가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 국가 중 9위로 여전히 답보 상태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구분	'10	'11	'12	'13	'14
점수	4.88	5.90	6.90	6.98	7.05
순위/전체대상국	6/16	9/16	11/16	10/17	9/16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3 우리공사의 반부패 청렴현황(2014년)

가 청렴도 측정 결과

■ 종합청렴도 7.95점(3등급 → 4등급 ↓), 공기업 Ⅲ유형 평균 8.17점

- 외부청렴도 : 8.55점(0.29점 ↓, 2등급 → 3등급)
- 내부청렴도 : 7.47점(0.84점 ↓, 3등급 → 4등급)
- 감점요인 : 0.39점(0.3점 ↑)
 - 부패사건 발생현황 0.27점, 신뢰도 저해행위 0.12점(응답자 4명)

구분	공사				공기업 Ⅲ유형 평균				전체기관 평균			
	12년	13년	14년	증감	12년	13년	14년	증감	12년	13년	14년	증감
종합청렴도	8.41	8.37	7.95	(0.42)	8.48	8.33	8.17	(0.16)	7.86	7.86	7.78	(0.08)
외부청렴도	9.32	8.84	8.55	(0.29)	8.87	8.60	8.41	(0.19)	8.10	8.09	7.95	(0.14)
내부청렴도	7.60	8.31	7.47	(0.84)	8.06	8.16	7.93	(0.23)	7.85	7.93	7.82	(0.11)
감점	0.45	0.09	0.39	0.30	0.13	0.12	0.18	0.06	0.15	0.16	0.16	-

* 공기업 Ⅲ유형: 정원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공직유관단체

■ 청렴도 하락원인 분석결과

- 금품·향응 제공요구 및 외부 부패사례 내부 응답으로 인한 감점
- 청렴도 설문에 호의적으로 응답하도록 유도 (총 291명 중 4명 응답)
- 내부 행동강령위반 발생 현황에 따른 0.27점 감점 발생

나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 평가결과 : IV등급(미흡), *전년대비 1단계 하락 (2013년 Ⅲ등급, 보통)

구분	공공기관 IV(29)
1등급	한국연구재단, 부산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2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환경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전력거래소
3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주택보증
4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구환경공단
5등급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부산환경공단

* 공공기관 IV(1) 기업군(29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 전년대비 주요 하락 원인

- 청렴도 점수 하락 및 청렴도 평가 시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으로 전체 감점 발생
 - 종합청렴도 7.95점(3등급 → 4등급 ↓)으로 전년대비 0.42점 하락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지표에서 홈페이지 접근성 관련 점수 저조
 - 사규 제·개정 예고와 관련한 홈페이지 접근성 3회 이내로 단축 필요
-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패공직자 발생으로 자체감사 및 부패예방 관련점수 하락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과 관련 외부감사 2건 발생

■ 청렴도 및 행동강령위반 관련 지표 외 점수합계는 소폭 상승

- 청렴도, 행동강령위반 제외 시 0.66점 소폭 상승

1) 기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며, 공사는 당시 임직원수가 500명 미만으로 공공기관 IV등급으로 분류

II.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

1 2015년 정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가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14.12.9, 국무회의)
-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갈 것('15.1.12, 신년 기자회견)

-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의 관행화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 고위공직자 등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 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 확립
- ※ '부정청탁금지법'을 통해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근절
- 정부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및 주요 국정현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정책 수립·추진 필요
 - 공공재정 누수, 민생관련 부조리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개선 및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 정비
-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에 대한 관심 제고로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요 증가
 -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 청렴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각급 기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동력 동기 제공

나 201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 구현

중점 추진 과제

- ◆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 취약분야 실태점검 및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 신고자 보호 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추진 전략

- ▶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직사회 청렴의식 수준 제고
- ▶ 취약분야 집중 실태조사 및 개선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 ▶ 부패실태의 과학적 분석 및 기관간 협업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2 2015년 공사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가 환경분석 및 시사점

기회 요인(O)	위협 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정부 3년차 공직윤리 강화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청렴성 요구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지속 강화 ■ 청렴과 관련된 외부기관의 지적 및 언론보도 지속 발생 ■ 공공기관 방만경영 관리 강화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척결을 위한 CEO 및 상임감사위원의 강력한 추진의지 ■ 감사실 인력확대로 추진 기반마련 ■ 참여형 청렴교육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경쟁력 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내부 청렴도 부진 ■ 비위사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 청렴정책의 제도화 규정화 미흡

- ☞ 사전에 부패를 차단·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
- ☞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취약분야 관리 대책 시급
- ☞ 청렴 리더십 제고를 위한 고위 공직자 등 간부직원의 솔선수범
- ☞ 전 직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나 추진전략

역량확대(SO)	선택집중(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 및 상임감사위원의 지속적인 청렴 실천의지 전파교육 ■ 전 직원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개발 ■ 자체청렴감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개발 및 운영 ■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연계한 청렴 전달교육 지속 실시 ■ 청렴교육의 의무시간 배정
기회포착(WO)	약점보완(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청렴 의식 내재화를 위한 설명회 및 강연회 개최 ■ 부패취약분야 종합관리 대책마련 ■ 임직원 행동강령의 강화를 통한 지속적 공직윤리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근절 ■ 청렴 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 반부패 인프라 구축

다 2015년 공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

-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 평가 결과 4등급으로 1등급씩 ↓
- 2015년도에는 전사적 청렴의지를 결집하여 청렴결백 KORES를 실현코자 함

비전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淸廉潔白 KORES**

목표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등급 달성**

추진 전략	① 반 부패 인프라 구축	②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③ 부패취약분야 종합관리	④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전략 과제	① 반부패·청렴 추진 TF팀 구성 ② 청렴 마일리지 제도개선 ③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강화 ④ 청렴 인증제 도입 ⑤ 공급자 의무준수 규정제정	① 임직원 금품신고 결과 공개 ② 청렴계약제 투명성 강화 ③ 청렴 옴부즈만 활성화 ④ 반부패 청렴수범 사례 공유 및 전파 ⑤ 사규입법예고 강화 ⑥ 준법감시활동 강화	① 부서별 취약분야 자율개선과제 ② 부패행위신고자포상 및 보호 업무표준제정 ③ 공직기강 점검강화 ④ 방만경영 분야별 체크리스트 고도화 ⑤ 공익신고 및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 활성화 ⑥ 부패비위 공직자 DB 등록관리	①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및 교육의무화 ②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③ 본부별 청렴 매칭 릴레이 교육 및 간담회 ④ 청렴문화행사 개최 ⑤ 청렴파트너 선정 및 협력

추진 조직 **감사실·청렴 옴부즈만·준법감시인·공정거래 및 청렴혁신위원회**

라 공사 청렴정책 중장기 로드맵



Ⅲ. 2015년도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① 반부패 인프라 구축	1	반부패·청렴 추진 TF팀 구성
	2	청렴 마일리지 제도 개선
	3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4	청렴 인증제 도입
	5	공급자 의무준수 규정제정
②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1	임직원 금품신고결과 공개
	2	청렴계약제 투명성 강화
	3	청렴 옴부즈만 활성화
	4	반부패 청렴수범사례 공유 및 전파
	5	사규입법 예고 강화
	6	준법감시활동 강화
③ 부패취약 분야 종합관리	1	부서별 취약분야 자율개선과제
	2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호 등 업무표준 제정
	3	공직기강 점검강화
	4	방만경영 분야별 체크리스트 고도화
	5	공익신고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활성화
	6	부패·비위 공직자 DB 등록관리
④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1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및 교육의무화
	2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3	본부별 청렴 매칭 릴레이 교육 및 간담회
	4	청렴문화행사 개최
	5	청렴파트너 선정 및 협력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추진방향

- ◇ 청렴우대정책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인센티브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반부패 청렴을 위한 사내 인프라 구축

① 반부패·청렴 추진 TF팀 구성 **신규**

○ 개요

-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감사실 내 청렴 전담 부서와 행동강령 및 윤리경영 담당자간 TF팀을 구성하여 사내 청렴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내용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 관련한 교육 및 행사 시 상시협의

- 운영기간 : '15. 4. 1 ~ (해지시까지)
- 구성원 : 감사실 내 청렴전담부서 및 경영혁신부서
- 주요업무 :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규정 개정 및 신고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 협력

- 부서 : 감사실, 경영혁신팀, 인재운영팀 (4월)

② 청렴 마일리지 제도 개선 **개선**

○ 개요

- 청렴정책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평가기준의 조정으로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

- 적용기간 : '14. 12. 1 ~ '15. 11. 30(12개월)
- 대 상 : 팀장 이하 전 직원
- 평가항목 : 반부패 경쟁력평가 및 행동강령 이행 등 청렴활동

○ 내용

- 2015년도 고위직 청렴도 평가점수를 내부평가(마일리지)에 반영
- 부서장 대민접촉 사전공개 시 마일리지 부여 검토
 - ↳ 용자, 국고보조, 기술지원, 구매관련 부서의 대민출장, 회의, 면담 등
- 청렴 마일리지 평가항목 추가 및 배점 조정
-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조치완료여부 마일리지로 반영
- 기타 청렴 마일리지 평가항목 추가 및 배점 조정

○ 부서 : 감사실(4월)

③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개선**

○ 개요

- 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구체화하여 예방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 내용

-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청렴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근거 마련**

-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 (교육) ④ 제15조 각 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 및 청렴 교육시간을 명할 수 있다.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 문구 삽입**

-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용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아니되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별표1 부당한 업무지시 기준>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사.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음 유형의 지시를 할 경우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음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

카.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타. 사업장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

- 기타 공사 자원개발 특성을 반영한 행동강령 개정 검토

○ 부서 : 경영혁신팀(5월)

④ **청렴 인증제 도입** **신규**

○ 개요

- 사내 청렴 공직자 인증을 통해 공사 임직원의 자긍심 함양과 함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여 자발적·능동적 청렴실천 문화를 확산코자 함

○ 내용

- 청렴 임직원 인증기준 충족 시 공정거래 및 청렴혁신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내 청백리 직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청렴 공직자 인증 주요 내용

- 청렴공직자 인증기준(예시)
 - ① 청렴교육 : 10시간 또는 행동강령 사이버 교육 이수
 - ② 청렴자가진단 : 90점 이상 획득
 - ③ 청렴노력도 : 반부패 자율과제 발굴 및 채택
 - ④ 법규위반 여부 : 법규위반과 비위사실이 없을 것
 - ⑤ 청렴 마일리지 : 고득점 상위 10% 이내 우수자
- 인센티브 내용
 - 인증서 수여, 명함에 청렴 인증 마크 별도 표시(스티커 지원)
 - 해외연수교육 선정 시 우대 등 인사참고자료 활용

○ 부서 : 인재운영팀, 인재양성팀, 감사실 (5월)

5. 공급자 의무준수 규정 제정 **신규**

- 개요
 - 공사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간 반부패·청렴 등 의무준수 규정을 제정하여 윤리적 동반성장 구현 추구
- 내용
 - 입찰참가신청이나 계약체결시에 공급자 의무 준수·서약을 의무화하여 협력업체 등의 동참 유도

- 가이드 라인
 - ① 윤리적 기준 : 뇌물제공 금지, 답합·청탁 금지, 소속직원 윤리교육
 - ② 사회적 기준 : 조세 및 노동법규, 합법적 근로, 인증·성별차별금지
 - ③ 환경적 기준 : 환경 및 안전법규, 환경친화적 기술, 안전한 작업환경

○ 부서 : 운영지원팀(7월)

2.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추진방향

◇ 수의계약 등 공사 업무수행 진행 절차 및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공개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1. 임직원 금품신고결과 공개 **신규**

- 개요
 - 임직원이 금지된 물품등을 받을 경우 반환(기증)전에 청백-e 시스템상 행동강령 위반 신고코너에 등록한 후 반환결과를 감사 알림방을 통해 전사적으로 공개·공유
- 내용
 - 무기명 제공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수수 신고사례를 공개하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반환처리 후 그 결과를 외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 청탁신고자는 청탁 거부자로 인정함
 - 청탁의 횟수 및 정도가 심각한 청탁자는 경고조치 및 인사반영 (청탁이 경미한 경우는 감사담당관 면담 및 주의 당부)

- 제공받은 금품 등의 신고 처리 절차
 청백-e 시스템 → 청렴윤리 → 행동강령신고 → 제공받은 금품 등의 신고
 ↳ 청탁자가 민간인인 경우는 조치결과 통보 서한문 발송
- 반환결과를 감사 알림방을 통해 전사 공유

○ 부서 : 감사실(4월)

② 청렴계약제 투명성 강화 개선

- 개요
 - 공사에서 체결하는 수의계약건에 대해 청렴이행각서 징구를 의무화 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수의계약을 국민에게 공개 하여 계약관련 업무의 투명성 극대화
- 내용
 - 납품비리 등 근절을 위해 청렴계약이행각서 징구 확인 철저
↳일상감사 시 계약관련 체크리스트로 도입
 - 청렴의무 이행 위반시 계약 해제·해지 등 제재장치 강화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수의계약 일체 공개
↳ 1천만원 이상 공개 → 전체공개로 변경 : 투명성 공정성 강화
- 부서 : 운영지원팀(연중)

③ 청렴 옴부즈만(시민 감사관) 활성화 개선

- 개요
 - 공사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 청렴 옴부즈만이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성 및 투명성이 필요한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조사 및 평가 실시
- 내용
 - 청렴옴부즈만 연 4회 정기 개최 및 안건 심의 확대
 - 주요개선 사항

항목	현행	개선
횟수	2회(7,10월)	4회(4,6,8,10월)
안건	공사 적용 가능 개선제도 연구 및 도입	반부패청렴정책 및 민원 관련 규정 개정 등

- 국고보조, 투자사업, 용자관련 규정 개정 시 의견 수렴
- 부서
 - 감사실, 준법감시인(연중)

④ 반부패 청렴수범사례 공유 및 전파 개선

- 개요
 - 공사 차원의 성과에 머무르고 있는 반부패 시책 정책을 적극 공유하여 대내외적으로 반부패 의지 전파 및 확산
 - 내용
 - 부패 시책평가와 연계하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추진 계획 및 공유수범사례를 다채널 온라인을 통해 전파
 -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20건 중심 우선 공유 및 전파
- 제로미 홈페이지 : 반부패 시책추진 계획 및 보고서 공유
 - 청백-e : 행동강령관련 신고내용 공개 및 확인
 - 감사알림방 : 전사 반부패 추진관련 행사 및 처리결과 공개
- 부서 : 감사실(연중)

⑤ 사규입법예고 강화 개선

- 개요
 - 공사 사규의 입법예고(재·개정)를 통해 대국민 업무관련 의견수렴 및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내용
 - 입법예고 대상 목록을 당해 사규 또는 일반 사규관리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추진
 - 사규공개 및 제·개정 예고 게시판의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 메인화면에서 사규공개 접근시 클릭횟수 2회 이내 도달

기존	변경
열린경영> 경영공시> 기관운영> 정관 및 관련법령/사규	알림이당 > 사규공개 및 재·개정예고

- 부서
 - 의사법규팀, 정보시스템실(5월)

⑥ 준법감시활동 강화 **개선**

- 개요
 - 주요 지원사업 등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감시로 내부통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사 청렴도 향상 유도
- 내용
 - 준법감시 5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세부실행계획 마련

- ① 국내지원사업 및 계약업무 등 집중 감시로 사고 사전 예방
 - 관행적 부조리 감시 및 불법·비리소지 등 부패요인 발굴
- ② 내규 제·개정시 사전 부패영향평가 등 실시로 부정사고 사전 방지
 - 내부규정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사전 제거
- ③ 운영회 등 각종 회의참석을 통한 사업추진절차 등 적정성 감시
 - 용자심의, 국고보조 선정, 용역입찰제안평가 등 절차 및 심사 감시
- ④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통제활동 강화로 경영위험요소 사전 제거
 - 전체 사규 및 업무표준(154개)에 대한 내부통제 적정성 검증
- ⑤ 반부패·청렴윤리 추진상황 점검·감시를 통한 청렴도 향상 유도
 - 예산유용, 부당업무처리, 상사 부당지시 등(권익위 조사항목) 점검

- 향후 부패영향평가 등 준법감시 관련 내용 교육 추진 : 연 1회 이상
- 부서
 - 준법감시인(3월)

3 부패 취약분야 종합관리

추진방향

-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근본적 원인 제거를 위한 부패신고, 방만경영 관리 강화 및 부패 자율과제의 지속적 발굴·개선

① 부서별 취약분야 자율개선과제 **개선**

- 개요
 - 각 부서별 취약분야 및 청렴도 제고 필요 분야 등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출하여 사전 예방적 부패관리를 통해 근본적 원인제거
- 내용
 - 외부청렴도 조사대상 부서는 1건 이상 의무적으로 제출

주요 부패취약분야 (국민권익위 권고)

-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의 누수가 예상되는 분야
- 방만 경영이 예상되는 분야
- 자회사 관리·감독 시스템이 미비한 분야
- 고질적·관행적으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

- 반부패 시책 평가 관련 과제채택 기준 배점 조정

평가 기준	배점		
	기존	변경	비고
· 부패 연관성 - 반부패 및 청렴관련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	30	10	20↓
· 제도화 여부 -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30	50	20↑
· 효과성 - 구체적 성과 제시 여부, 부패개선 및 예방 효과	30	20	10↓
· 창의성 - 기존의 과제와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과제인지 여부	10	20	10↑

- 반부패 시책 자율추진과제 실적평가 : 부서별 이행실적 평가

구 분	점수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
신규 부패 유발 요인 발굴 노력	5점	제출 시(건당, 최대 2건까지 인정)
	10점	과제로 채택된 경우(건당)
이행 노력	10점	채택과제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건당)
주요부패취약분야 해당과제	5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주요부패취약분야 해당과제를 제출한 경우(건당)

○ 부서

- 전 부서(연중, 과제제출 4월)

②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호 등 업무표준 제정 신규

○ 개요

- 직위상벌규정 제23조의4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패행위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부패행위신고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수준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지급사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법령,사규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지급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 신고금액의 20%(최대 2천만원) - 기타 2천만원 이하

- 보상금 지급사유 및 심의내용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 지급사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보상금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기타 보상금 지급결정, 지급제한, 심의위원회 규정

-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 의무 및 위반 시 벌칙규정 도입

-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불이익 구제절차 규정

○ 부서

- 인재운영팀 (5월)

③ 공직기강 점검강화 개선

○ 개요

- 구조적·관행적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 및 실효성 확보

○ 내용

- 2015년 공직복무관리 계획 별도 수립 및 4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 ② 무관용 원칙 등 징계기준 강화 ③ 예산투명성 및 청렴의식 제고 ④ 유관기관 협력 및 사기진작

- 기강감사 시 테마별 집중 감사 실시

감사대상부서	집중감사업무	감사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서(임직원) (민원신고사항의 경우 특정인 국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규정 위반행위 ▪ 행동강령 위반행위 ▪ 민원신고사항 조사 ▪ 기강확립 점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명 - 총괄 : 1명 - 압행감찰 : 2명 - 기강감찰 : 5명

- 시기 : 연중(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대통령해외순방 시 및 필요시)
- 방향 : 정례화된 점검보다 불특정, 불시 암행감찰 등 상시 점검

○ 부서

- 감사실 : 연중

4] 방만경영 분야별 체크리스트 고도화 개선

○ 개요

- 공사 기관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소 분석 및 도출을 통해 방만 경영 관련 체크리스트 고도화 및 활용

○ 내용

- 6대 고유사업 및 4대 일반경영 프로세스에 대한 신규요소 추가
↳ 신규 위험요소 착안사항 43개 추가로 전체 174개 체크리스트 운영
- 공사 위험요소별 위험수준 파악 및 측정주기를 고려한 내부통제 고도화

주요발생계층분석	+	발생가능성 측정	+	발생주기측정(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발생계층 분석 ○ 계층세분(담당자~경영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수준 등급화 ○ 고위험 사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사례발생주기 분석 ○ 월단위 발생주기 관리강화

- 체크리스트 고도화를 통해 주기적 위험관리 강화 및 대내외 지적 사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종합, 특정, 성과감사 시 방만경영사례 점검 시 활용 강화

○ 부서

- 감사실 : 4월

수 공익신고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개선

○ 개요

- 공익신고 및 복지보조금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홍보, 교육 등 다채널 매체를 통한 지속적 활성화 추진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운영지침 공유 및 홍보영상 시청
↳ 감사 알림방을 통한 전사 공유, 직급별 교육시 홍보 영상 시청
- 연 1회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의무화
- 홈페이지 배너연계를 통한 복지부정 및 공익신고센터 운영
- 포스터, 리플렛, 전광판, 배너 등 다채널 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의 부정수급 • 보상금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상당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10(신고 관련 전문상담) - 신고접수 : 인터넷, 팩스(02-2110-0678), 방문·우편 (정부 과천청사 2동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부서

- 감사실 : 연중 상시 운영

6] 부패·비위 공직자 DB 등록관리 신규

○ 개요

- 부패·비위 공직자 DB 등록 및 관리를 통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고 사후 발생가능한 리스크 축소 및 예방

○ 내용

- 대상 : 부패사건 관련 피징계자
- 효과 : 해외소장/국내·외 P파견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근무제한

○ 부서

- 인재운영팀, 감사실(5월~)

4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추진방향

- ◇ 참여형 반부패·청렴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술선 수범의지를 확산시키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 및 내재화 유도

1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및 교육 의무화 **지속**

- 개요
 - 공사 고위직에 해당하는 임원 및 간부직원의 청렴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및 교육을 통해 자기관리 유도
- 내용
 - 청렴도 측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상임이사 및 팀장급 이상 간부사원(감사실장 등 제외) • 모형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청렴도 측정평가모형 활용 •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 조직 개방성, 권한의 크기, 연고주의 등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 청탁 위험성, 퇴직자 재취업 등 - 개인별 청렴도 : 직무청렴성, 술선수범, 준법성 등 • 산식 : 내부설문 100% - 계량평가(감점) • 평가단 구성

구분	상위	동료	하위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X	△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X	△	소속직원	비소속직원
			○	○
개인청렴도 평가 (평가단별 가중치)	○	○	○	
	20%	30%	50%	

- 간부사원 교육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청렴 윤리 임직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자세
- 교육방법
 - 외부전문가 초빙 자체 집합 교육 : 상하반기 2회(4월, 9월)
 - 청렴사적지 탐방교육 : 현장중심의 청렴교육 1회 시범 실시 (전남 장성 평생교육센터 방문교육)
 - 사이버 교육 : 청렴연수원 또는 자체 사이버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연 5시간 이상 (집합교육 4시간 이상 필수)

- 부서 : 감사실(4월~7월)

2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지속**

- 개요
 - 신규임용(신입), 승진(3급, 2급, 1급), 고위직(임원) 진입 등 공직의 각 전환 단계별 일정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하도록 직무교육에 편입운영
- 내용

구분	신규임용자 (신입사원)	승진자 (1급-3급)	고위공직자 (임원)
목표	청렴을 내면화하여 청렴초심을 유지	승진후 부패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공직에 몰입	사회 지도층으로서 명예와 자긍심 고취
시간	인사발령 후 1년 이내 5시간	승진 후 1년 이내 10시간	본부장 임명 후부터 1년 이내 5시간
내용	공직자의 기본자세 행동강령 주요내용	주요 부패사례, 윤리적 갈등 상황 및 대처방안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고, 이해충돌상황 대처법 등
방법	자체 교육, 국민권익위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등		

- 부서
 - 인재양성팀, 감사실(연중)

③ 본부별 청렴 매칭 릴레이 교육 및 간담회 **신규**

- 개요
 - 본부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상임감사위원 및 전담 감사인의 청렴 릴레이 교육을 통해 청렴도 및 반부패 청렴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전사적 소통 강화
- 내용

구분	본부별 청렴 매칭 릴레이				간담회
	상임감사위원	감사1팀 감사인	감사2팀 감사인	감사3팀 감사인	상임감사위원 감사실장
대상	간부직원	전략경영본부 인재경영본부	자원개발본부 사업2단	자원기반본부 기술경영본부	① 신입사원 ② 중간관리자 ③ 간부사원
시기	연간 2회(4,9월)	연간 1~2회(연중)			계층별 1회
내용	공직자의 자세	공사 청렴도 및 반부패 정책 내부신고 및 공익신고 등			사내 청렴 문화 조성

- 부서
 - 감사실(연중)

④ 청렴문화행사 개최 **지속**

- 개요
 - 반부패 서약식,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청렴 숭선부범 의지를 확산 시키고 자율적으로 학습, 참여·공감·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
- 내용
 -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복합 실시 예정
 - ↳ 장소 및 시기에 따라 프로그램은 조정 예정

- 주요 프로그램 예시 내용

전사적 공감	+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	외부강연 특별초빙
반부패 서약식 행사		청렴골든벨, 청렴 가요제, 청렴 콘텐츠 공모전, 청렴 연극제 등		반부패 관련 전문가 초방강연 등

- 부서
 - 감사실 (5월~9월)

수 청렴파트너 선정 및 협력 **지속**

- 개요
 - 공사와 업무유형이 유사한 기관을 「청렴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하여 반부패·청렴업무 우수 시책 공유 및 교류로 청렴역량강화
- 내용
 - 청렴업무 관련 고위직 주관회의 개최 : 연 1회 이상
 - 실무자간 반부패 청렴시책 공유 및 활용

<주요 협력 기관>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 부서
 - 감사실(7월, 9월)

IV. 과제별 추진일정 및 담당부서

부문	주요과제		담당	일정
① 반부패 인프라 구축	1	반부패·청렴 추진 TF팀 구성	감사실 경영혁신팀 인재운영팀	4월
	2	청렴 마일리지 제도 개선	감사실	4월
	3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경영혁신팀	5월
	4	청렴 인증제 도입	감사실 인재운영팀	5월
	5	공급자 의무준수 규정제정	운영지원팀	7월
②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1	임직원 금품신고결과 공개	감사실	4월
	2	청렴계약제 투명성 강화	운영지원팀	연중
	3	청렴 옴부즈만 활성화	감사실 준법감시인	연중
	4	반부패 청렴수범사례 공유 및 전파	감사실	연중
	5	사규입법 예고 강화	의사법규팀 정보시스템	5월
	6	준법감시활동 강화	준법감시인	3월
③ 부패 취약분야 종합관리	1	부서별 취약분야 자율개선과제	전부서	4월~
	2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호 등 업무표준 제정	인재운영팀	5월
	3	공직기강 점검강화	감사실	연중
	4	방만경영 분야별 체크리스트 고도화	감사실	4월
	5	공익신고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활성화	감사실	연중
	6	부패·비위 공직자 DB 등록관리	감사실 인재운영팀	5월
④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1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및 교육의무화	감사실	4~7월
	2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감사실	연중
	3	본부별 청렴 매칭 릴레이 교육 및 간담회	감사실	연중
	4	청렴문화행사 개최	감사실	5~9월
	5	청렴파트너 선정 및 협력	감사실	7,9월